

전남도, '전남형일자리' 모형 만든다

김영록 지사, 미래전략산업 육성 방안 제시

"어떤 분야 초점 맞추지 설계...전담팀 운영"

임금을 줄이는 대신 일자리와 복지를 늘리는 노사 상생형 '광주형일자리'에 발맞춰 전라도가 '전남형일자리' 모형 창출에 나설 방침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에서 제2, 제3의 광주형일 자리를 확산하겠다고 밝히면서, 전남 역시 전남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전남형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분궤도에 오르면서 한국 경제의 새 모델이 될 것으로 환영받고 있다"면서 "전남도

도 정부 일자리 정책에 맞춰 전남형일자리 사업을 발굴, 새로운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해야 나가자"고 지난 12일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공식 제안했다.

김 지사는 "제조업의 토대 위에서 서비스 산업과 관광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제조업과 관련된 전남형일 자리를 만들어 보다 많은 일자리를 도민들에게 제공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정부 시책으로 추진중인 광주형일자리와 '농도' 전남의 특성상 농업분야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제2의 광주형일 자리를 추진하고 있는 전북 군산과 경북 구미 역시 지역의 핵심 제조업인 조선·자동차, 전자·반도체 등을 대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부산, 인천, 충청 등도 제2의 광주형 일자리를 찾기 위해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추세에 발맞춰 전라도 역시 '전남만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남의 경우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 외에도 미래전략산업으로 에너지 산업과 관광레저산업 등을 추진하고 있어 어떤 분야를 대상으로 '전남형일자리' 모형을 만들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농도' 전남의 특성상 농업분야도

빼놓을 수 없어 '전남형일자리' 모형은 ▲석유화학·조선 등 기존주력 산업 ▲관광레저, 생물약, 우주·항공, e-모빌리티 등 미래전략산업 ▲농업분야 중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전남도는 전남형일자리 발굴을 위해 일자리정책본부 산하의 담당팀을 지정, 어떤 분야에 모형을 만들어내갈지 초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민선 7기 김영록호가 전남만의 특색을 가진 일자리모형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면서 "전남은 제조업 관련 산업기반이 취약하므로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전남형일 자리를 잘 설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도출원기자 repo333@srb.co.kr

"수영대회공동응원단 구성하자"

금강산 간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北에 제안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이 북한을 방문해 '통일진료소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공동응원단 구성'을 제안했다.

남구는 13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지지재단 자격으로 북한 금강산을 찾은 김 구청장이 전남 북측에 통일 분위기 확산과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 의료와 체육 분야 교류 사업을 각각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의료 분야에서는 풍수해 등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통일진료소를 개설하는 것으로 의료진 파견과 인도적 차원의 구호 물품, 의약품, 의료장비 지원사업을 제시했다.

의료 지원사업은 의료봉사 경험이 풍부한 아시아희망나루와 광주 남구의사협회 등과 협력하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체육분야 사업으로는 광주세계수영



대회와 관련해 남북의 대학생과 청년, 주민 등 400명 가량으로 구성된 남북 공동응원단 운영을 제안했다.

또 대회기간 남구 지역내 대학에서 통일 음악회와 평화통일축전 공동개최도 제시했다.

이같은 제안에 북측은 내부 검토를 거쳐 향후 민화협을 통해 답변을 전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구청장은 "제안이 실현되면 광주형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시발점이 될 것이고 지방정부와 민간, 주민들이 추진하는 첫 번째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될 것이다"며 "나눔과 연대의 정신이 확산돼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서흥섭기자 zorba85@srb.co.kr

"미세먼지 담당 인력 태부족"

신수정 시의원, 2명이 9곳 측정소 관리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 이에 대처할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광주시의회 신수정(더불어민주당·북구3) 의원은 시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미세먼지 측정·경보 담당하는 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 지역 미세먼지 데이터를 측정·분석해 경보를 발령하는 시보건환경연구원의 미세먼지 전담 인력이 부족하며,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구원 내 전담부서가 신설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 환경조사과 내 과장을 제외한 연구사 6명 가운데 미세먼지 등 전담인력은 2명에 불과하다.

연구사 2명이 시 전역 대기측정소(도시대기 7곳, 도로변대기 2곳) 9곳을 관리·운영하며, 측정된 대기질 데이터를 분석해 미세먼지 주의보·경보의 발령 해제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10월말 대기오염측정소 2곳가 신규 설치되고, 11월 말 이동측정차량이 도입 및 운영된다.

이동측정차량 운영 시 환경연구사 1명, 운전원 1명 총 2명 인력이 필요함에도 아직까지 인력이 미확보된 상황이다.

시는 대기전담 부서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기후대기과를 신설했으나 정작 실무를 담당하는 보건환경연구원 내에는 전담부서가 없다.

김현주기자 5151khj@srb.co.kr



이용섭 광주시장이 13일 오후 광주그린카진흥원을 방문해 2019년 성과창출 계획과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뒤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형 자동차공장 연내 착공 지원 강화"

광주그린카진흥원, 이용섭 시장에 업무보고

(재)광주그린카진흥원이 광주형일자리 완성차공장 연내 착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광주그린카진흥원은 광주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기획 및 기업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광주그린카진흥원은 13일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빛그린산단내 광주형 자동차공장 연내 착공 지원을 위해 첫번째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친환경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일환인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와 선도기술지원센터, 부품차량테스트베드 등을 10월 착공할 예정이다.

또 친환경클러스터사업으로 구축한 시제품과 기술개발, 시험생산 장비 등 자동차공장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장비구축을 지원한다. 광주형 자동차공장 설립에 필요한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지역기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지원도 강화한다. 70개사를 대상으로 127억 원을 투입해 기술개발 31건, 기술지원 85건, 사업과 지원 97건, 인력양성 20건 등 총 233건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 내 친환경자동차 부품기업 기술고도화를 위한 기업장비를 구축하고 친환경자동차 부품개발 지원 연구센터를 착공한다. 친환경차 부품산업 기술을 고도화시켜 지

역 부품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지역 내 자동차기업 지원을 통해 신규고용 70명을 창출하고 매출을 연평균 2.5%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다.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신산업 기획을 위해 향후 5년간 420억원을 투입해 미래자동차 카비니언스 기술을 개발하고 300억원이 투입되는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도 오는 2024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광주 친환경자동차산업의 거점 기관으로서 광주그린카진흥원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광주형 자동차공장 건립을 적극 지원하고 중소기업 육성에도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새마을장학금 폐지조례안' 심의 연기

시의회·시민단체, 찬·반 갈등 고조... "일단 보류"

광주시의회가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폐지안)'에 대한 결정을 뒤로 미뤘다.

해당 조례안을 둘러싸고 시민단체간의 찬반 여론이 형성된데다가 폐지안 통과 여부를 결정할 상임위원회 의원들간에도 이견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광주시의회는 13일 4층 대회의실에서 폐지안 심의 여부를 두고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이번 폐지안은 장연주·김광관·신수정·최영환·정무장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새마을운동의 역사적 평가는 인정하지만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시대에 새마을회에만 자녀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조례 폐지를 놓고 새마을단체와 다른 시민사회단체간에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조례 폐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이날 의원총회가 열린 대회의실 앞에서 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와 '조례 존치'를 주장하는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의 충돌이 빚어졌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의원 총회에서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이번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논란이 확대되자 심의일을 오는 19일로 연기했다.

김현주기자 5151khj@srb.co.kr

민간공원 '영터리평가' 공무원 징계 요구

'영터리 평가'로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는 등 논란이 일었던 광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게 됐다.

13일 광주시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징계심의를 통해 민간공원 2단계 사업 담당 공무원 9명에 대해 징계(2명 중징계·7명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평가계획 수립 등 관리·감독을 미흡하게 한 당시 과정(4급)과 계약평가 기준을 명확

하게 제시하지 않은 담당 공무원(5급)은 중징계 하기로 했다.

평가 내용을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았던 당시 국장(3급)을 비롯해 잘못된 평가에 참여한 5명은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선두콩나물
공수이콩나물

호남최대 최첨단 생산시설을 갖춘 선두콩나물영농조합법인 광주·전남지역 콩나물, 숙주나물 판매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선두콩나물영농조합법인

☎ 062)959-3231 / 010-3632-8587